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6년 3월 17일

제06-07호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변화: 배경과 시사점

은 중 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jheun@kiep.go.kr Tel: 3460-1121)

주요 내용

- 중국 국무원은 금년 2월 말,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능력 배양’과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2006~2020년)」와 이의 실제 추진을 위한 재정, 금융, 정부구매 등과 관련된 부속정책을 내놓았음.
- 더불어 중국정부는 최근 자주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급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전략적 인식 제고를 촉구하고 있음.
-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은 종전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전략이던 ‘시장·기술 교환전략(市場換技術)’이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전략’으로 교체될 것임을 시사함.
- 중국의 새로운 자주적 혁신 전략은 ‘미국식 전략대국형 모델’과 ‘동아시아식 추격국가형 모델’을 혼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외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남미화(南美化)’를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정책은 광범위한 첨단 및 기초 산업영역에서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산업 구성으로 볼 때 향후 한·중간 경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수정은 외자기업의 공헌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향후 對외자기업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1. 중국의 자주적 혁신에 대한 전략적 추구

- 최근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래 25년간 연평균 9.6%에 달하는 양적 성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의 대외의존성과 자국 기업의 혁신능력 부재에 주목,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2006년 2월,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능력 배양’과 ‘혁신형 국가(创新型 國家) 건설’을 목표로 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강요 2006~2020년」¹⁾ (이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위 계획의 실제 추진을 위한 재정, 금융, 정부구매 등과 관련된 부속정책²⁾을 선보였음.
- 더불어 최근 중국정부는 자주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급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전략적 인식 제고를 촉구하고 있음.
- 자주적 혁신을 강조하는 과학기술발전정책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제고를 추구하는 최근 중국정부의 일련의 정책은 기술추격(technology catch-up)전략이던 ‘시장·기술 교환전략(市場換技術)’이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2. 기술추격전략 수정의 배경

-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수정은 종전의 기술추격전략인 ‘시장·기술 교환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현재 중국기업의 기술역량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
 - 시장·기술 교환전략이란, 외자기업에 중국시장 접근을 허락하는 대가로 선진적인 기술의 도입을 요구함으로써, 중국내 기술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전략, 즉 시장을 주는 대신 기술을 받는 전략임.
-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FDI 유치에 적극 나섰던 것은 부족한 자본의 조달과 함께 외자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으로의 활발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및 기술파급(technology spillover) 효과를 기대했던 것임.

1) 「國家中長期科技和技術發展規劃綱要(2006-2020年)」

2) 「實施〈國家中長期科技和技術發展規劃綱要2006-2020年〉若干配套政策」

- 그러나 최근 들어 외자기업의 대량 유입이 과연 국내기업의 기술능력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일고 있음.
 - 상무부의 「2005년 재중(在中) 다국적기업 보고」는 ‘중국으로 FDI가 대량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술수준의 질적 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며 ‘시장을 건네줬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술은 얻어내지 못했다’며 이른바 시장·기술 교환전략이 애초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음.
- 실제로 중국의 대외무역이 급증하고 하이테크 산업분야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중국 전체 수출입의 58% 이상이 외자기업의 몫이고, 특히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외자에 의한 수출 및 수입 비중(2004년 기준)이 각각 87.3%(1445.9억 달러)와 77.6%(1252.5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외자기업 의존도가 높음.
- 더욱이 외자기업의 투자형태가 중·외 합작 및 합자 기업에서 독자(獨資)기업(외국이 단독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중국기업이 외자기업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기술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고 있음.
 - 외자기업 중 독자기업의 비중은 1999년 38.6%에서 2003년에는 62.4%까지 상승했음. 이 기간 중 합자회사는 39.3%에서 28.8%로 감소하였음.
 - 특히 중국의 전체 하이테크 산업 수출에서 외상 독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9%(2003년 기준)로 매우 높으며, 독자기업의 하이테크 수출은 95%가 핵심 중간재, 부품 등을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가공무역임.
 - 산업분류상 하이테크 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공정은 노동집약적인 단순조립 등 저부가가치 공정이 많아, 중국 하이테크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처질 뿐 아니라, 최근 추세적으로 감소하기까지 하였음(표 1 참고).
-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으로부터 중국측 합자 파트너나 중국내 전후방 연관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기술파급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함.

표 1.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부가가치율 국제비교

연도	중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2000	2001	2003	2000	2000	2001	2001	2001	2000
부가가치율(%)	26.50	25.24	24.49	42.63	35.81	36.41	26.44	40.46	34.38

자료: 张小蒂·徐曼, 「我国基于FDI自主创新能力的培育」, 『国际贸易问题』, 2005年 第12期에서 재인용(www.sts.org.cn).

- 즉 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세계적 경영구도 속에서 중국을 단순한 조립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외자의 기술이전 및 중국기업의 기술학습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중국은 이른바 후발자 이득(late comer's advantage)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함.
- 더욱이 높은 외자기업 의존도에 대한 중국내 우려는, 중국경제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와 같이 자주적 역량을 갖지 못한 채 자국의 경제성장이 다국적기업들에 좌지우지되는 종속적 발전을 지속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남미화(南美化)’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3. 새로운 기술추격전략의 제시

가.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 202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은 향후 15년의 정책목표로서, 자주적 혁신능력의 강화,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분야의 종합적 실력 강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성과의 획득, 혁신형 국가의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분야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제조업 및 IT 산업의 기술수준을 세계 선진수준에 근접시킴. (2) 농업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종합적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을 달성함. (3) 에너지 개발 및 절약 기술 향상을 통해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을 세계 선진수준에 근접시킴. (4) 중점 산업과 도시지역에서 친환경 순환경제를 실천함. (5) 중대 질병의 방지수준을 급속히 높이며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수준을 제고함. (6) 현대식 무기와 설비를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방 능력을 제고함. (7)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와 연구진을 육성해 과학기술발전의 주된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성과를 거두고, 특히 정보기술, 생물, 신재료,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함. (8)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고 기업 역시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을 보유케 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국가혁신체제를 완성함.
-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은 향후 R&D 지출을 크게 늘려, 2010년에는 3,600억 위안을, 2020년에는 9천억 위안을 R&D에 투입, GDP 대비 R&D 지출 비율(GERD/GDP)을 각각 2%, 2.5%까지 높이겠다고 밝힘(2004년의 R&D 지출은 1,966억 위안이었으며 GERD/GDP는 1.23%이었음).
- 특히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려 혁신형 국가 건설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투입을 대폭 증가시키고, 앞으로 재정에 의한 과학기술투자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항상 높게 유지하기로 하였음.
- o 1990년대 중반 이래,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투입 증가율은 줄곧 재정수입 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낮았음.
- 이는 지난 1986년,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자원의 배분을 강화했던 기존의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o 중국의 전체 R&D 지출에서 정부재정에 의한 지출비중은 1990년 54.9%, 1995년 50.0%, 2000년 33.4%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음.
- R&D 분야 정부재정 지출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기조의 전환은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에도 과학기술투자에서만은 정부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이 같은 변화는 도시 및 공업 부문에 대한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80년대 중반 이래 줄곧 이어져 오던 ‘시장화’ 기조에 ‘전략적 고려’가 새로이 가미된 것으로, 체제전환 개발도상국의 시장화 개혁정책이 전략대국(戰略大國)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WTO 가입 이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특정산업 육성정책의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향후에는 R&D 투자 강화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을 자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의 이번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이 미국과 같은 ‘전략대국형’임을 시사하는 또 다른 측면은 민(民)·군(軍) 결합의 추진과 생명·우주항공 등 기초과학에 대한 강조임.
- 중국은 향후 국방과학체제를 변혁, 민·군 결합을 추진키로 하였음.
- o 중국 당국은 선진국에서는 민·군간 기술공유율이 85%를 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군용 연구개발과 민수용 연구개발이 분리 추진됨으로써 많은 중복과 낭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방 관련 연구를 민간 연구기관에도 위탁하고 군의 조달사업에 민간 연구기관 및 기업의 참여 범위를 넓히기로 했음.

-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은 또 2020년까지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리며, 발명특허 등록과 과학논문의 피인용에 있어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기술혁신지표로 단순히 발명특허와 과학논문의 신청 및 발표 건수를 사용하기보다, 이들의 등록과 피인용 건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 o 이는 현 후진타오 체제가 과거와 달리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한편 중장기 과기발전계획과 함께 발표된 중공 중앙과 국무원의 「과기발전계획 실시에 관한 결정」³⁾은 향후 중국 과학기술발전의 4대 지도방침으로 (1) 자주적 혁신, (2) 선택과 집중(重点跨越), (3)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뒷받침(支撑发展), (4) 미래의 개척(引领未来)을 제시 하였음(표 2 참고).

표 2.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의 4대 지도방침

4대 지도방침	주요 내용
1. 자주적 혁신	원시적 혁신(原始創新), 조합혁신(集成創新), 수입기술의 소화·흡수·재혁신 모두를 자주적 혁신으로 인정해 동시 추진
2. 선택과 집중	일정한 기초와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영역과 민생과 국가의 안전에 핵심적인 영역에 집중
3. 경제성장 뒷받침	경제사회의 긴급한 수요에 조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지원함.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공유기술(Generic Technology)을 개발.
4. 미래의 개척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수요를 창조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의 경제사회 발전을 주도

-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자주적 혁신’을 원시적 혁신뿐 아니라, 조합 혁신(集成創新), 수입된 기술의 소화·흡수·재혁신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임.
- 조합혁신이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중국시장의 요구에 맞게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중국 특색의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o 예컨대 이미 존재하는 고정전화기술을 이동전화기술과 조합하여 개발된 중국형 저가 이동전화 샤오링통(小灵通)을 들 수 있음.
- 조합혁신의 강조는 다국적기업들이 공정분할을 통해 들여온 기술이 중국내 산재하지만 각 기술의 전후방 연계는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가치사슬을 따라 이어져 있을 뿐 중국내에서의

3)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科技規劃綱要增強自主創新能力的決定」(2006. 1. 26)

상호 연계가 낮다는 문제의식과 중국 내수시장의 특성에 조응하는 중국 특색의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수입기술의 소화·흡수·재혁신은 수입기술을 모방하는 데서 시작해 차츰 디자인과 기술에서 독자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거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전형적인 기술추격전략임.
- 요컨대 중국의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은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남으로써 남미 국가와 같은 종속적 발전을 답습하지 않고, 미국과 같은 전략대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추구하고, 동아시아국가들의 성공적 기술추격 경험을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나. 중장기 과기발전계획 실시를 위한 부속정책

- 중국은 2020년까지 향후 15년에 걸쳐 추진할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그 계획의 실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구매, 재정, 금융, 기술표준, 지식재산권, 인재육성, 과학대중화, 과학기술정책의 통일적 협조체제 구축 등과 관련된 부속정책⁴⁾(이하 부속정책)을 내놓았는데,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부구매 관련 부속정책은 ‘자주적 혁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기로 하였음.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에는 국산설비 구매비율을 60% 이상(금액 기준)으로 유지하고 국방분야의 정부구매에서는 국내 자주적 혁신제품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음.
 - o 이는 종전과 같이 동질 제품에 대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품을 정부구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이테크 제품 공급원으로 외국기업만이 선정되고, 국내기업은 저가의 일상용품만을 납품하면서 기술개발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o 부속정책은 정부구매에서 자주적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이를 통한 자국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음. 따라서 정부구매는 향후 중국의 중요한 산업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세제혜택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용의 150%를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겠다고 밝힘.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용 기기 및 설비 도입에 있어 단가 30만 위안 이하에 대해서는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해줌.
 - 금융지원과 관련해 중소 과학기술기업 융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

4) 「實施〈國家中長期科技和技術發展規劃綱要2006-2020年〉若干配套政策」

입하고, 적절한 시기에 벤처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인 ‘창업반(創業板)’을 개설키로 함.

- 기술표준과 관련, 중국이 제정에 참여한 자주적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정부 주관부문과 산업별 협회 등의 협조하에 적극 지원, 중국내 표준 선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음. 또한 국제 기술표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하였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국제적 신용도를 높이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되,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과 독점적 행위는 적극 방지하기로 하였음(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참고).

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인식 제고

- 중국은 WTO 가입 준비가 한창이던 2001년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대폭 정비하였으며, 최근 입법 차원의 준비를 마무리해가는 한편 지식재산권법의 실제 집행(enforcement)⁵⁾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실질적 보호 강화보다 더욱 눈에 띄는 변화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높아진 전략적 인식임.
 - 최근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자주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인식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운용’ 필요성에 대한 각급 정부와 기업 차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음.
 - 실제로 국무원 부총리 우이(吳儀)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주도했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공작조’의 조장뿐 아니라 2005년 1월부터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제정 영도소조,⁶⁾ (www.nipso.cn)의 조장도 겸임하면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독려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또 외자기업의 과도한 지식재산권 청구에 대해서는 「反독점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중국 과학기술부의 용역과제로 안후이대학, 상하이교통대학 교수 등이 지난 2005년 11월 작

5)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자기업과 선진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은 있으나 그 실제 집행이 매우 불완전한 현상’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측의 개선노력을 촉구해왔음.

6) 본 영도소조에는 20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성, 보고한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 연구보고서』⁷⁾는 다국적 기업들은 최근 중국내 특허 신청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획득에 적극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현재의 「부당경쟁방지법」 등으로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反독점법」의 도입을 촉구하였음.

4. 중국의 자기반성에 대한 재해석

- 중국은 외자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과거의 시장·기술 교환전략에 안주하지 않고 자주적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자기반성과 기술추격전략의 수정이 지난 10여 년의 노력이 완전한 실패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비록 FDI 유입으로 인한 중국 산업과 기업의 기술수준 및 자주적 혁신역량의 강화가 중국 정부의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은 많은 기술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음.
 - 더불어 FDI 유입으로 인한 기술학습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현재 수많은 중국 노동인력이 40여만 개의 외자기업 안에서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음을 고려하면, FDI를 통한 기술흡수가 실패했다고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음.
- 최근 특허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기술역량 강화를 엿볼 수 있음.
 - 2005년 중국내 특허(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포함) 신청건수는 총 47만 6,264건으로 동기 대비 34.6% 증가하여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o 특허 신청 중 내국인에 의한 것이 38만여 건(전체 신청건수의 80.5%)으로 동기대비 37.4% 성장했으며, 외국인의 신청은 9만 여 건으로 동기대비 24.4% 증가해 내국인에 의한 특허 신청 증가율이 외국인보다 13% 포인트 높았음.
 - o 특히 기술적 함량이 가장 높은 발명특허의 경우, 내국인 신청은 9만 3,485건(전체 신청의 53.9%)으로 동기대비 42.1%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신청은 7만 9,842건으로 동기대비

7) 『在中國跨國公司知識產權濫用情況及其對策研究報告』

24.1% 증가해, 내국인 신청 증가율이 외국인보다 18% 포인트 높았음.

- 더욱이 직무 발명을 바탕으로 한 특허 신청이 非직무(개인) 발명의 경우보다 증가속도가 빨라 2000년 1:1이던 직무 대 非직무 발명의 비율은 2005년 3:2(직무발명이 특허 신청의 67%를 차지)로 개선되었음.⁸⁾

■ 더불어 해외 특허 신청에서도 중국은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통한 해외 특허 신청에서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 5년 사이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핀란드 등을 추월하고, 2005년 세계 10위로 부상하였음(표 3 참고).

표 3. PCT를 통한 해외 특허 신청

(단위: 건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추정치	점유율	성장률
EPC 회원국	36,031	40,681	42,506	43,299	44,032	46,446	34.60%	5.50%
미국	38,007	43,055	41,292	41,023	43,464	45,111	33.60%	3.80%
일본	9,567	11,904	14,063	17,393	20,223	25,145	18.80%	24.30%
독일	12,582	14,031	14,326	14,682	15,255	15,870	11.80%	4.00%
프랑스	4,138	4,707	5,089	5,172	5,181	5,522	4.10%	6.60%
영국	4,795	5,482	5,376	5,205	5,041	5,115	3.80%	1.50%
대한민국	1,580	2,324	2,520	2,949	3,554	4,747	3.50%	33.60%
네덜란드	2,928	3,410	3,977	4,480	4,236	4,435	3.30%	4.70%
스위스	1,989	2,349	2,755	2,860	2,881	3,096	2.30%	7.50%
스웨덴	3,091	3,421	2,990	2,612	2,844	2,784	2.10%	-2.10%
중국	784	1,731	1,018	1,295	1,706	2,452	1.80%	43.70%
캐나다	1,801	2,114	2,260	2,270	2,109	2,315	1.70%	9.80%
이탈리아	1,394	1,623	1,982	2,163	2,196	2,309	1.70%	5.10%
호주	1,576	1,664	1,759	1,680	1,837	2,022	1.50%	10.10%
핀란드	1,578	1,696	1,762	1,557	1,672	1,866	1.40%	11.60%
기타	3,894	4,758	4,972	5,289	5,682	5,835	4.40%	2.70%
전체	93,240	108,231	110,390	115,198	122,607	134,073	100.00%	9.40%

자료: WIPO

8) 직무 발명이 非직무 발명보다 많다는 것은 기업의 특허신청이 개인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됨.

- 미국에 등록된 특허건수도 역시 2000년대 들어 크게 늘고 있어, 중국의 기술능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음(표 4 참고).

표 4. 중국이 매년 미국에 등록한 특허 수(1985~2005년)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특허등록수	4	7	33	34	30	28	24	36	30	30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허등록수	28	33	49	61	95	186	283	282	310	380

자료: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검색

- 이상과 같이 볼 때, 최근 중국의 기술추격전략의 변화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이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을 기반으로 해야 지속가능하다는 판단과 새로운 발전단계에 도달한 중국의 새로운 전략적 구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시사점

- 중국은 지난 25년에 걸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기술추격전략 및 경제성장방식의 재조정을 꾀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정책과 부속정책들은 중국이 종전의 시장·기술 교환전략에 안주하지 않고, 자주적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술추격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자주적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정책은, ‘미국식 모델’과 ‘동아시아식 모델’을 혼합한 것으로 중국의 새로운 기술추격전략 및 경제성장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같은 새로운 전략을 통해 중국은 자국 경제와 산업, 기술이 외자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남미화(南美化)’의 우려를 씻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정책과 부속정책,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들은 보다 완속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면서도 중국내 각급 정부와 기업에 각 방면의 ‘전략적 인식’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수정은 외자기업의 공헌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향후 對외자기업 정책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물론 중국의 새로운 기술추격전략인 ‘자주적 혁신 전략’이 종전의 ‘시장·기술 교환전략’을 단기간 안에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며, WTO 가입 5년차를 맞는 중국의 대외개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우리는 ‘높은 對외자기업 의존도’와 ‘기업의 부족한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중국내 비판을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중국경제의 자생적 역량은 경제의 총량적 증대에 못미치는 바가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히 증가율 등은 중국기업의 기술역량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함.
 - 더욱이 중국이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반성하는 데 있어 비교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대부분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인 바, 중국이 스스로 들춰낸 자기비판의 근거들을 우리에게 대한 중국의 추격 및 경쟁압력을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오독(誤讀)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정책은 광범위한 첨단 및 기초 산업영역에서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산업 구성으로 볼 때 향후 한·중간의 경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의 대중 정책에 있어 산업간 분업구도를 자의적, 편의적으로 상정하기보다는 현재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